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https://www.keas1967.com>) / 발행인 김도기 / 편집인 이재덕 / 편집팀 김재현, 김어진, 유나은, 박민우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www.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방향과 향방

신 현 석 | 고려대학교 교수

언제나 논의의 출발은 어차피 현실을 바탕으로 한 현재 시점이다.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들여다보고, 현재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집단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그 진단과 해법도 달라진다. 다양한 가치의 분화가 권리로 보장되는 근대의 다원화 경향이 빚어낸 다원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귀결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통합 그리고 국민의 공익적 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가치전쟁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다. 정책이 안고 있는 일종의 숙명이다.

정책 문제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절대 명제와 논리가 있다고 믿는 정초주의가 무색해지고, 오로지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작은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그 진리조차도 권력과 결합한 편의적인 지식의 열거 나열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가사회의 한 자율적 영역으로서 교육 분야의 정책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보편과 특수,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날 우리의 고등교육정책이 처한 현실과 미래를 조망하고 더 나은 길이 있다면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의 방향과 향방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2022년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2023년에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형교육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산업·사회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글로벌대학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대학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4년에는 좀 더 과감하게 교육개혁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방향 설정을 통해 대학개혁으로 역동적인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고 하였다.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모델 개발, RISE 사업 추진체계 구축과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인재양성체계를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교육부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경쟁 심화에 대비하는 대학개혁의 불가피성을 들어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동감한다. 물론,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가 국가사회가 처한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의 기초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UNESCO 2050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과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 확인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혹자는 건전하게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급진적인 교수단체에서는 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쟁을 조장하는 시장주의적이며, 학문 균형발전과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공성 부재의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한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 당국과 재야단체의 대립 양상을 관점의 선택을 통한 다원적 이념과 가치의 충돌로 환원하는 것은 게으른 평론에 불과하다. 언뜻 두 진영 간의 견해 대립은 가치와 관점의 불가양립성에 근거한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 간의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단순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승자는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 가치와 이념이 향도하는 대로 방향의 쪽이 결정되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일관하는 편향적 주장이라는 현상을 넘어 본질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고등교육정책의 본질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다면 생각의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초적 아이디어 혹은 이상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다. 그 아이디어가 향하여 나가는 곳을 ‘향방’이라고 하면, 정책의 현 존재는 선택된 방향만 난무하고 향방은 실종된 상태가 아닐까 싶다. 방향의 설정을 위해 작은 경험적 사실의 입증에 몰두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담론의 편포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 창조하는 본질로서의 향방 탐구에 대한 논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의 정치성과 합리성

모든 정책은 정치성과 합리성의 교합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는 정책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교합관계는 서로 경쟁하는 배타적인 관계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영역에 침윤되거나 배타되어 무지개처럼 뒤섞여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경도될 경우 정책의 균형과 서로 다른 가치의 공존이 어렵게 된다. 고등교육정책의 정치적 색채가 강하면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좋은 점은 어차피 정책이 국정운영 차원에서 통치권자의 권력 작용과 법규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의 동의 그리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호혜로운 거시적 정책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책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은 고등교육정책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정치·경제 권력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면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교육, 기술적 장치로서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정책의 ‘책’은 정책이 정치성과 더불어 기술적 합리성의 논리가 결집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정책은 정

책 문제에 대한 예비적 검토와 해결방안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정책연구가 사전에 진행된다. 정책연구는 보통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단계이지만 권력과 지식이 결합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급박한 정치 현안 혹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쟁점일수록 정책의제의 격발장치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크고, 선택 방향에 따라 권력이 지식을 향도하는 정치성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교육개혁이 이 정부의 3대 개혁의제로 채택되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의 어젠다가 교육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관심사로 격상되었다. 단순히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은 글로벌대학 30에서 지자체와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대학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필수화하였다. RISE 사업은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대학 살리기는 지역소멸 타개를 위한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의 정치적 과제이자 대학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거시적인 환경변화로 촉발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응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비교적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계 교수단체들의 걱정과 비판에서 언급된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이 생략된 점은 단순히 정치적인 주장을 넘어 정치적 합리성 확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의 토로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문제해결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치적 변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합의에 좀더 정교한 거버넌스와 관련 장치의 마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통치권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총론적 요구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 확대라는 정치적 합리성 제고와 정책추진의 기술적 대책 마련의 매개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사회의 관계에서 교육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사회집단이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중립적인 중재자이거나 집단간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단지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일 뿐 실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와 정부는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국가는 통치의 기반으로서 조직화된 내부구조(정부)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회영역과 밀접하게 상호작용 혹은 관계하면서 국가-사회관계 속에 위치하는 실체적 존재이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국가론은 국가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호를 결정하고 쟁취할 수 있는 국가주의 혹은 국가중심론과 구별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치가 사회의 다른 부분과 차별화되는 동시에 정치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회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은 타 부문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그 자체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 각 영역의 특성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제도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이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에서 찾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교육'이라는 의미의 관련성(relevance) 확장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첨단분야 미래 인재양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교육체제의 구조개혁과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등의 고등교육정책은 환경의 요구라는 독립변수에 반응하여 고등교육체제의 결과 속을 재구조화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이 국가-사회의 협력적 제도 구축을 통해 피동적인 정책의 종속변수로서 희석되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문제가 사회적 난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지

출 경감,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RISE 사업은 교육문제가 곧 사회문제이며, 종래 교육중심적 교육정책이 사회정책화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표명되었다.

국가 고등교육정책에서 교육영역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국가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과장된 비판이 사실적 검증 없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하고 있는 것은 비서구권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숙명처럼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정부의 행정 권력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으로 대별되는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에 의해 제약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묵도하고 있다. 물론, 교육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국가의 교육정책 장면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열함을 토로할 수는 있다. 교육문제를 사회적 난제와 연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교육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과 관련성을 강조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편적 사회 정책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교육논리의 특수성에 기반한 교육의 독자성이 희석되는 가운데, 교육의 기능적 수단화를 교착시키고 타 영역의 논리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맺음말: 더 나은 길의 모색

‘미래의 인재, 대학의 미래: 지금의 대학은 살아남지 못한다!’(권오현 외, 2022)와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오찬호, 2015)은 상징적으로 우리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두 시각을 표징한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 정책의 중심 논리, 국가-사회의 타 영역과의 관계에서 교육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이 다르게 표출된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환원하면 마치 본질과 실존, 담론과 명제, 주체와 타자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가치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학의 이상이 기능적으로 정의되고, 혁신을 넘어 변혁이 도모되며, 과학 공동체의 지식 분화가 심화되는 마당에 공적 지식인으로서 교수와 학문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실(Rhode, 2006; 송호근, 2023)에서 어느 한쪽의 선택보다는 포섭이든 융화든 중용지도(中庸之道)로서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을 통해 조금 더 나은 길을 세 가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이견을 넘어 정책이 지향하여 이르는 곳, 즉 향방의 지점에 대한 사유와 숙고 가 필요하다. 대체로 지금까지 고등교육정책의 추진계획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수단-목표의 도구적 수사와 보이지 않는 비전의 나열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측은 근거가 부족하고 특정의 이념과 이즘에 경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현존 권력의 일방적 주장이라 매도한다. 서로에게 동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 방향을 넘어 정책의 향방을 900년 대학 역사의 이성적 숙고를 통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이 상아탑 시대를 넘어 멀티버시티로 보폭을 넓히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상이자 목적은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와 ‘대학의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이다.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 대학은 싸워왔고, 국가-사회의 인정 하에 대학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했고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국가-사회의 협업적 동반관계를 통해 고등교육은 시대적 변혁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OECD와 UNESCO의 세계 교육에 대한 권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고등교육정책의 정치성과 합리성의 균형 복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의명분의 공감 확보에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인식

동의를 통한 분위기 조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후속 정책 실행에서 공감이가 유지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정교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풍성한 지지 담론의 지속과 확산이 필요하다. 정치적 성격의 정책의제가 합리적인 구체적 후속 조치와 기술적 보완이 없으면 공허한 정책목표와 비전은 건각되고, 울림 없는 대립적 담론만 무성한 채 기획과 집행의 불일치 패러독스만 남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책 혹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정책연구는 기술적 방안의 묘수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책 논리의 근거 기반을 탐구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담론이 무성하게 조성되어 공론장에서 경연되는 토대 구축의 역할을 담지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의 연구(study)가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 치장의 한계를 넘어 현상 탐구의 장을 여는 연구(research)로 깊어질 때 정책의 정치성과 합리성의 상보적 교합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정책에서 교육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교육문제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단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사회 현상은 다학제적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영역을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참여한다. 국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사회영역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나간다. 사회의 공통적 관심사로서 교육문제의 범위 확대는 교육영역에 본질적인 고민을 안겨준다.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지는 교육문제를 보는 교육계의 관점과 정서적 기반의 실재성은 교육영역의 특성을 의미하지만, 다른 영역의 논리와 견줄 만한 교육논리의 사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은 이런 문제의 답을 해소하는 정도에 따라 그 견고함이 결정된다. 교육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이 정책적으로 모색되는 현실에서 정서적 측면에서 발현되는 교육의 논리가 사회적 공론장에서 회색되거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감정적 집단논리로 폄하되지 않으려면, 교육논리의 이념적 속살이 교육적 지식 탐구와 집단 지성의 발휘를 통해 공고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오현 외(2022). 미래의 인재, 대학의 미래. 서울: 프로체.
- 송호근(2023). 21세기 한국 지성의 몰락: 미네르바 부영이는 날지 않는다. 서울: 나남.
- 오찬호(2015).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서울: 문학동네.
- Rhode, D. I. (2006). In pursuit of knowledge. Palo A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시론 |

성공적 RISE 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언

이길재 | 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에서 2023년에 발간한 RISE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를 보면, 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고등교육 분야 역점 정책으로 제시하였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정책목표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비전 체계기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과연 RISE 체제의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소멸을 해결하는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본 고에서는 RISE 체제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RISE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살펴본다.

먼저, RISE 체제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 실재를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자체, 중앙 RISE센터, 시도별 RISE센터, 그리고 참여 대학들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중앙 RISE센터는 시도 RISE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시도 RISE센터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RISE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도의 경우 지자체 내에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대학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RISE센터를 지정하고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설계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발전계획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대학지원 계획을 지자체 주도로 교육부에 제안하고 교육부·시도 간 협약체결에 기초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거버넌스 주체들의 활동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 지역협의체가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이다. 지역고등교육위원회는 지자체장, 대학의 총장, 산업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RISE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산학협력 강화 및 취·창업 촉진, 지역 정주 여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서 지역고등교육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에 더해,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사업의 모델로 크게 4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지역정주형 인력양성 과제이다. 지자체와 협업 기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고, 취·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과제이다. 둘째로, 지·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과제다. 지역 산업 전략과 연계해 대학의 연구 활동 수행이나 기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계획이다. 셋째는 혁신적인 직업·평생교육 과제인데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지는 안이다. 마지막이 지역 현안 해결 과제인데,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난제 해결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4가지 과제 이외에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라면 수립하여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의 산업 중 지역대학과 연계할 분야를 발굴하여 5년간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적 RISE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ISE 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동의와 공감이다. 현재 7개의 지자체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RISE체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RISE 초기 계획서와 1년 후 현재 계획서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초기에 지자체, 대학, 산업계, 지역사회 구성원 간 미흡했던 소통의 과정이 점차 성숙할수록 당초 설계했던 사업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향후 2025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RISE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부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RISE계획을 수립한다면, 7개의 시범운영 지자체의 경험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별 고등교육지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Data-Base 기반 정량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수없이 많이 기획되고 실행되었던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제출하는 자체적인 사업성과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기본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 부작용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RISE체제가 성공적으로 착근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고등교육지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RISE센터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 대학 수준의 성과관리 시스템(IR Data-Base)과 연계함으로써 기존 대학 차원의 성과관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교육부, 지자체, 중앙 RISE센터, 지역 RISE센터, 대학 간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 확립이다. 먼저 교육부의 경우, RISE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을 적기에 배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산업영역을 선정하여 관련 역량과 비전을 갖춘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 RISE센터는 그 동안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RISE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RISE센터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립된 RISE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RISE체제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별 실행과제 기반 전략적인 특성화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구성 주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분석이다.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 지역사회의 경제와 산업 여건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학의 인력양성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대학의 학과 정보, 충원율, 취업률,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대학의 학과나 학문영역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의 경제와 산업 여건 및 고용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의 강점과 대학의 강점을 연계하여 지역 인재양성 프로젝트 분야를 모색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을 도출하여 5년 동안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제해줄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대학은 새로운 RISE체제에서 설계하는 과감한 혁신안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혁파함으로써 혁신을 위한 토대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공개된 2023년 제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또다시 자체적으로 갱신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망국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을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생태계의 혁신에서 찾은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RISE체제의 성공적인 착근을 바라며 글을 맺는다.



| 시론 |

‘大學’으로서의 글로벌대학30 정체성에 대한 소고

김 지 선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으로 분주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등록금의 동결 및 인하, 반값등록금으로 재정난이 악화된 이래, 대학들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뛰어들어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충해 왔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나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는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과 결부되었고,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일반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 자체를 선정하는 결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에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 2023년부터 추진된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는 5년간 1,000억(연평균 200억)을 주는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대학을 살리는 윤석열 정부 최고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끊임없는 재편 속에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소위 글로벌대학¹⁾의 육성을 추진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다(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23.4.24.). 2024년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에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은 94개 대학이었고, 예비지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학은 10개 대학(통합 포함 14개 대학)²⁾이었다. 올해 10개 대학, 2025년과 2026년 각각 5개 대학 추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프로젝트가 종료되는 5년 뒤 글로벌대학 내·외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지자체와 글로벌대학은 진정한 상생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을까? 글로벌대학은 산학과 지역협력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의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진일보되었을까? 무엇보다 글로벌대학이 지역의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 있을까? 상상만 해도 몹시 설레는 일이고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의 경쟁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지금의 대학들이 잃지 말아야 할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금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된다.

고대에서 중세,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대학이 가지는 학문과 진리에 대한 탐구, 시대에 맞게 사유하는 교양인과 보편 지식인의 양성은 많이 퇴색되었고 무색해졌다. 8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었고, 그들은 사회 변화의 큰 원동력이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학위가 주는 지적 권력은 신뢰되었고 대학의 특권은 존중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요구는 어떠한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고등교

1) 글로벌대학이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의미한다(교육부, 2023.4.).

2)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공동,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공동,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공동,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공동,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10개

육 정책인 대학설립준칙주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결과이겠지만, 우리나라가 트로우의 고등교육 단계³⁾에서 보편화단계⁴⁾에 접어들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대학 학위자의 양적 팽창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을 상회한 지도 오래되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단계에 접어들면 대학교육은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의 육성, 새로운 넓은 세계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2021; 김종영, 2021: 39 재인용). 이로써 대학들은 기업적 대학⁵⁾으로 변모하여 교수법의 변화, 학생들과의 교육적 관계의 변화, 교수들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를 겪으며 시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과정을 설계하게 된다(Barnett, 2011).

그러나 대학은 책임성 있고 본래적인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본래성이란 대학의 내적 존재, 즉 내적 소명의 지향을 의미하며, 책임성은 대학 자체의 직접적인 관심을 뛰어넘어 갖게 될 의무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Barnett, 2011: 281). 즉, 책임 있는 본래적 대학은 보편적 가치, 진리와 학문에 대한 학습과 탐구에 대한 관심을 지구적 맥락에서 수행·봉사하는 것이다(Barnett, 2011: 269).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들은 국가, 학생, 재정지원, 학부모, 노동시장 등으로부터 온갖 압력과 기대, 요구를 받으며 더욱더 기업적이고 수행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방식은 지역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연구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권력-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세계를 바꾸는 인재와 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자생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김종영, 2021). 창조권력의 연구대학들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 속에 과학적 대학 혹은 기업적 대학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으나 상이탑으로서의 성격, 형이상학적 대학의 정체성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대학들이 빌둥(Bildung)의 의미를 새겨 교육이 인간의 타고난 지적 능력과 인간성을 만드는 일, 교화와 도야, 자기다움이 되어감의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 역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빌둥은 빌렘 폰 훔볼트가 말하는 고등교육 모델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개별적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는 독일의 정신적·교육사적 전통을 의미한다(신현철, 2017). 빌둥은 현재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에 비판적 인식을 가진 개인을 길러냄으로써 인류 전체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를 지향한다(정영근, 2008: 137-139). 빌둥은 기술적 전문화(Spezialisierung)의 교육이 강조되는 기술공학적 진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 책임성을 지각하며,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창조적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학적 도야가 필요함을 인식시켜 준다(정영근, 2008: 146). 결국 사회(대학)⁶⁾를 변화시키는 힘도, 미래사회(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는 힘도, 이상적 미래(대학)를 향해 나아가는 힘도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별적 인격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대학)의 핵심적 문제들을 논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3) 고등교육의 저명학자인 마틴 트로우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발전 단계는 대학진학률에 의해 엘리트 단계(15% 이하), 대중화 단계(15~50%), 보편화 단계(50% 이상)로 분류된다(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추진본부, 2021; 김종영, 2021: 39 재인용).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 2000년 68.0%, 2008년 83.8%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 7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5) Barnett(2011)은 대학의 존재를 형이상학적 대학, 과학적 대학, 기업적 대학, 관료적 대학으로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Barnett(2011) 참조 바람.

6) '사회'라는 용어 대신 '대학'으로 대체하여 해석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학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부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맞추려는 대학의 모습 또한 대학이 닦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을 지역의 거점 대학들, 지역을 넘어 창조권력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으로 나아가야 할 대학들이 모두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다시 한번 대학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사유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4.).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3.4.24.). 교육부는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 김종영(2021).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가: 살림터.
- 정영근(2008). 훔볼트(W. v. Humboldt)의 도야(Bildung) 개념. 교육철학, 43, 131-150.
- 신현철(2017). 대학론, 대학을 공부하다. 서울: 소명출판.
- Barnett, Ronald. (2011).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지현 (번역), 서울: 학이당. (원전 출판 연도 2011)

• 2024년 학회주요소식 •

1. 52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s://www.keas1967.com/ E-Mail: keas1967@daum.net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김제현(한국교원대학교, keas1967@daum.net)
간사	성명	총무간사: 김어진(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010-9808-8116 총무부간사1: 유나은(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회원 및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행정관련 업무 총무부간사2: 박민우(한국교원대학교) - 업무: 회계관리, 법인 등 행정관련 업무 편집간사: 신원규(국립공주대학교) - 업무: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편집부간사: 신윤미(국립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2. 학술지발행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호	접수 마감일	발간 예정일
42권	1호	2024년 02월 29일
	2호	2024년 04월 30일
	3호	2024년 06월 30일
	4호	2024년 08월 31일
	5호	2024년 10월 31일

문의 : 신원규 편집간사 (keas1967@nate.com)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로서,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학회지 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본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0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2004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후 명실상부 교육행정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동안 여러 선배들께서 이룩해 오신 발자취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학회지 발간 업무(논문 접수, 심사, 편집, 발간, 공시 등)와 관련하여 심야 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 등에 편집간사나 부간사 개인 휴대전화로 문의나 요청이 과도한 상황이며, 전일제가 아닌 간사들의 개인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심야 시간이나 휴일 중 긴급한 문의나 요청의 대부분은 논문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거나 가능 여부 문의, 증명서 발급 요청 등으로 어차피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심야나 휴일에 처리가 어려운 사안들이었습니다.

2024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1차 이사회(2024.1.26.)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회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고 「교육행정학연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편집간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회지 발간과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 학회 홈페이지에 편집간사의 휴대전화 번호 삭제 및 이메일 주소만 공개
 -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 접수, 심사, 편집, 발간 일정은 미리 공지된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심사 및 발간 대상에서 제외
 -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한 질문 및 요청은 이메일(keas1967@nate.com)만 가능
- 편집위원회 및 간사의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월~금, 9시~18시”로, 업무 시간에 접수된 이메일 내용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및 회신
 - 학술지 발간 등에 대한 안내와 접수, 처리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되는 발간 관련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의 및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새로운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 인해 「교육행정학연구」에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회비납부안내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4. 학회행사소식

1) 2024년 제1차 이사회 개최

가. 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 오후 3시 (약 1시간 진행)

나.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다. 참석 : 당연직 및 선임직 이사, 사무국 담당자 등

라. 안건 : 2024년 52대 임원 및 위원회 소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

024년도 임원 및 위원회 소개

2. 제52대 한국교육행정학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소개

- [가계분과위원회] 이태희(한국고려대학교)
- [학술위원회] 정영진(서울대학교)
- [학제지원위원회] 정영수(서울대학교)
- [조직관리위원회] 오병호(서울대학교)
- [모태운영위원회] 이주(한국교육개발원)
- [국제학술위원회] 김현(고려대학교)
- [학술발전위원회] 박수정(충남대학교)
- [정책연구위원회] 이종현(한국교육개발원)
- [신도학사지원위원회] 김용호(국립중앙대학교)
-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이상미(충북대학교)
- [윤리위원회] 박종원(한양대학교)
- [세태교육연구위원회] 주영희(경상대학교)
- [소식논문상위원회] 노종희(한양대학교)
- [주심환리대심위원회] 박남7(광주대학교)

3. 제52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소개

사무국장 김계현(한국고려대학교)
 총무간사 김예진(한국고려대학교), 강선희(한국고려대학교)
 편집간사 신원규(문주대학교), 안종현(문주대학교)

9. 정책연구위원회

□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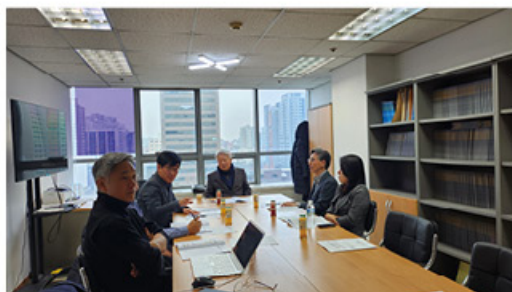
- 위 원 장 : 이종현(KIED)
- 부위원장 : 김호수(공직대)
- 위 원 : 오영환(KIED), 송호준(KIED), 박희진(계명대), 한수민(강원대), 신원익(국가행정교육진흥원), 이태나(한국고려대학교)

□ 사업 계획

- 사업 목표
 - 외부 정책연구과제 수주에 의한 학회 및 연구역량 강화, 재정 안정화에 기여
 - 정책연구에 대한 회원 참여와 학회 발전을 통해 학회 활성화
 - 정책연구에 학술연구(학술대회, 포럼)와 연계한 연구 성과 확산
 - 다년간의 정책 수주를 통한 학회 자원의 안정적 정책연구 수행
- 사업 내용
 - 수주 가능한 연구과제 탐색 및 연구 수행 제안
 - 과제 수행 요청에 대한 수주 여부 논의 및 결정

2) 2024년 사단법인 신년 간담회 개최

- 가. 일시 : 2024년 2월 29일 (목) 오전 11시 (약 1시간 진행)
- 나. 장소 : 한국교육행정학회 법인 사무실
- 다. 참석 : 법인 이사, 학회장, 사무국 담당자 등
- 라. 안건 : 1차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사안 보고



3) 향후 학술대회 개최

- 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포럼운영위원회 1차 포럼
 - 대주제: 한국 교사 전문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교사 전문성 기준 국제 사례 분석
 - 일 사: 2024.4.3.(수) 14:00~16:00
 - 장 소: 페이트 호텔 강남(페이트홀)
 - 운영방식: 대면 및 온라인 스트리밍
- 나.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대주제: 한국교육학의 미래 방향과 좌표(미래 한국 교육학 70년 설계)
 - 일 사: 2024.6.28.(금)~6.29.(토)
 - 장 소: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 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 일 사: 2024.11.23.(토)
 - 장 소: 한국교원대학교

5. 회원 동정 및 신간 안내

1) 회원 동정 안내



김지선 회원

국립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임용
(2024.1.10)



신재흡 회원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취임
(2024.2.1.)



문찬주 회원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임용
(2024.3.1.)



이영신 회원

서원대학교 교육혁신원 조교수 임용
(20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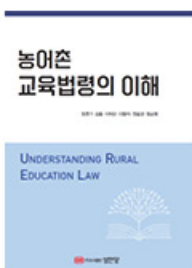
2) 회원 신간 안내

〈2028 대학 입시, 학교 교육에 집중하라!〉 정제영 저 / 포르체 / 2023.11.15.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중2 이하 초등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위해 정제영 교수가 앞으로의 입시 제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028 대입 개편안은 9등급제이던 내신을 5등급제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던 수능을 통합형 수능으로 전환한다. 내신과 수능 모두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학교가 중심에 서도록 변경한 것이다.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신념이다.

〈농어촌 교육법령의 이해〉 임연기, 김용, 이덕난, 이형석, 전윤경, 정순원 저 / 성안당 / 2024.01.10.



이 책은 농어촌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저자인 임연기(공주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와 김용(교원대 교수),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이형석(우석대 교수), 전윤경(현천교 교사), 정순원(KERIS 연구위원) 등 5인의 공동 저자가 도서출판 성안당에서 2024년 1월 10일에 펴낸 전문서이다. 일차적으로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해석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법령이 농어촌 교육에 주는 의미를 부여하고, 법령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행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수는 37%, 학생 수는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 교육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도시학교 중심이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중심적 사고와 접근방식은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농어촌 교육법령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감소시대에 농어촌 교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학교의 가치와 보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농어촌 교육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법제의 정비는 현행 법령의 기반 위에서 실천 가능하므로 법령의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가 그 출발점이다.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명령,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의 체계, 이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진 판례와 법 해석 사례 그리고 정부의 계획과 국내의 운영사례 등의 폭넓은 법령정보들을 분석하였다.

농어촌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조명하고, 농어촌 교육법령을 학생의 권리와 복지는 보편적 사항과 특수한 사항, 교육과정은 자율성과 책무성, 교원은 안정적 확보와 우대조치, 학교정책은 규모의 적정화와 존속, 학교시설과 재정은 일반 기준과 특수 기준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다루었다.

〈교사론과 교직실무〉 박수정, 권희정, 김수구, 김훈호, 맹재숙, 박정우, 신철균, 이종업, 최진경, 한은정 저 / 박영스토리 / 2024.02.07.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 어떤 교사로 살 것인가? 교직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예비교사와 신입교사에게 필요한 주요 교직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리더십〉 정바울, 양성관, 이경호, 김재희 옮김 / 살림터 / 2024.02.29.



이 책은 불가능에 가까운 교육 변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스턴 칼리지의 앤디 하그리브스와 교육 컨설턴트인 딘 핑크가 지속가능성과 리더십 개념을 핵심축으로 삼아 일곱 장에 걸쳐 분석한 저서 『Sustainable Leadership(지속가능한 리더십)』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위한 깊이(깊고 넓은 학습), 지속(지속과 리더십 승계), 너비(위임이 아닌 분산), 정의(공존의 리더십), 다양성(복잡성과 융집성), 풍요로운 자원(자제와 재생), 보존(역사와 유산)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앤디 하그리브스가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이 책은 교육리더십과 학교혁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연구자, 학교 리더 및 현장 교사, 그리고 예비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디지털 교육의 이해〉 정재영, 계보영, 김갑수, 박보람, 박효용, 전우천, 정영식, 조한국, 최숙영, 하민수 저 / 박영스토리 / 2024.02.29.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기술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예비 교원으로서, 또는 현직 교원으로서 독자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디지털 교육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 실제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전략, 그리고 교원들이 자신의 교수 활동에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6. 2024년 회비납부 명단(2024년 2월 29일 기준)

1) 2020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

구성우 김병찬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2) 2024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21명), (s: 학생회원)

구유정 구태진 김두섭 김수혁s 김승정 남혜정 박근아 박소정 박수진 박지수s 박지애 박지현
 박철규 이선희 이채윤 이한나 임철일 정민지 정영식 홍지환 황윤정

3) 2024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96명), (s: 학생회원)

강원근 고은애 고 전 공희정 광연륜 권초아 김갑성 김도기 김도훈 김무영 김민규 김병찬
 김선이 김 용 김용일 김은수 김정아 김지현 김택균 김하얀 김한나 김혜진 류민영 문지영
 박남기 박대권 박동찬 박선행 박소영s 박수아 박수정 박수현 박영숙 박유민 박정우 배정훈
 변기용 변수용 서지영 서화정 송경오 송인영 신광윤 신상명 안영은 안혜연 염민호 오범호
 오승천 오재준 오혜근 유길한 윤소희 윤혜원 이근수 이기용 이길재 이미희 이상철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승현 이영신 이원재 이인서 이인수 이재덕 이지연s 이호준 이희숙 임서영s
 장수정 정광호 정상명 정성수 정수현 조경식 조석훈 주영효 차성현 차지철 채재은 최연우
 최예슬 최우석s 최원석 최윤정 최지원 하동엽 하은호 홍창남 황재운 황정훈 황준성 황현철

4)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4명)

고 전 박선행 김도기 변기용

5)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40명)

권순형 김병찬 김 용 김한나 박대권 박수정 박영숙 서재영 서지영 서화정 송경오 오범호
 유길한 윤홍주 이기용 이길재 이수정 이쌍철 이재덕 이희숙 정성수 주영효 주현준 차성현
 채재은 최원석 홍창남 황준성

6) 2024년도 기관회원 납부(1곳)

나이스북(경기도교육연구원)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8. 제 52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김도기(한국교원대학교)
- 부 회 장 : 변기용(고려대학교)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34인)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 전
박선형	김병주	김도기	변기용						

• 선임직 이사(70인)

고장완 (성균관대)	권순형 (KEDI)	김갑성 (한국교원대)	김규태 (계명대)	김덕희 (우송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병찬 (경희대)	김왕준 (경인교대)	김 용 (한국교원대)
김용련 (한국외대)	김이경 (중앙대)	김정희 (대교협)	김한나 (충신대)	김훈호 (국립공주대)
김희규 (신라대)	나민주 (충북대)	남수경 (강원대)	박대권 (명지대)	박상완 (부산교대)
박소영 (숙명여대)	박수정 (충남대)	박영숙 (KEDI석좌)	박종필 (전주교대)	박주형 (경인교대)
백정하 (대교협)	서재영 (한남대)	서지영 (용인대)	서화정 (대구대)	송경오 (조선대)
신재홍 (한성대)	신정철 (서울대)	신철균 (강원대)	안선희 (충부대)	양성관 (건국대)
엄문영 (서울대)	오범호 (서울교대)	유길한 (진주교대)	윤홍주 (춘천교대)	이광현 (부산교대)
이기용 (국립안동대)	이길재 (충북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 (KEDI)	이석열 (남서울대)
이성희 (KEDI)	이수정 (세종대)	이승호 (KEDI)	이쌍철 (KEDI)	이인희 (제주대)
이재덕 (한국교원대)	이정기 (고신대)	이정미 (충북대)	이희숙 (강남대)	임수진 (광주교대)
전제상 (공주교대)	정성수 (대구교대)	정수현 (서울교대)	정제영 (이화여대)	주영효 (경상국립대)
주현준 (대구교대)	차성현 (전남대)	채재은 (가천대)	천세영 (충남대 명예)	최원석 (경인교대)
최정윤 (KEDI)	함승환 (한양대)	허 주 (KEDI)	홍창남 (부산대)	황준성 (KEDI)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김훈호 (국립공주대)	김영식 (경남대)	김지연 (지방교육재정연구원)	문찬주 (충남대)	신철균 (강원대)	심현기 (국립공주대)
			이쌍철 (KEDI)	정성수 (대구교대)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이정미 (충북대)	김민희 (가천대)	오세희 (인제대)	장덕호 (상명대)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채재은 (가천대)
			최정윤 (KEDI)			
윤리위원회	박종필 (전주교대)	유평수 (전주대)	가신현 (고려대 세종)	이경호 (고려대)	임수진 (광주교대)	조성만 (대전서부초)
세대교류 연구위원회	주영효 (경상국립대)	엄준용 (중부대)	김덕희 (대구가톨릭대)	김도훈 (충남삼성고)	윤해원 (서울상천초)	이동엽 (KEDI)
			정주영 (고신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노종희 (한양대명예)	(호선 예정)	강인수 (수원대석좌)	김혜숙 (연세대)	박세훈 (전북대)	서정화 (홍익대명예)
			신중식 (국민대명예)	이종재 (법인이사장)	임연기 (공주대명예)	주삼환 (충남대명예)
주삼환 리더십상 위원회	박남기 (광주교대)	(호선 예정)	김성열 (경남대)	김이경 (중앙대)	박영숙 (KEDI석좌)	신봉섭 (나사렛대)
			신재훈 (한성대)	천세영 (충남대명예)	한유경 (이화여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